

위기의 김정은 정권의 희생양 찾기와 ‘신 선군정치’의 징후

조 한 범(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2023. 08. 29. | CO 23-25

김정은 위원장 격노의 의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평안남도 안석간석지를 현지 지도하며 제방 붕괴와 침수 피해에 대해 격노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가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며 “철두철미 건달군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에 의한 인재”라며 관련자들을 “당 중앙의 호소에 호응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로 규정했다. 북한에서 당 중앙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며, 따라서 최고 지도자의 호소를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조직지도부, 규율조사부, 국가검열위원회, 그리고 중앙검찰소가 책임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해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할 것을 명령했다. 북한의 모든 최고 사정, 감찰기구에게 합동 조사를 지시한 셈이다.

북한에서 당적, 법적 처벌은 사형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암시한다. 2013년 6월 북한에서 발간된 학습제강 “모든 일군들이 ... 진짜배기 지휘성원이 될데 대하여”에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를 ‘반당 반혁명 분자 리영호놈’으로 표현하고 ‘당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역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전정갑 서해전대장과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철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적용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격노한 대상은 김덕훈 총리와 내각이다. 김 위원장은 “내각에 사업체계가 옳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며 실속없는 일군들이 등용”되어 있다며, “김덕훈 내각의 행정 경제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새로 국가

경제사업을 다 맡아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 경제를 망친 주역이 내각인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내각 총리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비뚤어진 관점’ 등 총리를 다섯 번이나 호명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내각을 경제사령탑으로 규정하고 김덕훈 총리를 중용하던 이전의 태도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희생양, 김덕훈 총리와 내각

2020년 8월 취임 이후 김덕훈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각종 경제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북한의 매체는 종종 김정은 위원장 뒤에 김 총리를 호명해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그러나 김덕훈 총리와 내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의 제약, 장기 국경봉쇄의 후유증, 그리고 알곡생산구조 변화정책 등 각종 정책적 실패로 북한 경제의 희생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노동당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내각은 실권이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관본위주의와 단위특수화, 즉 권력기관들의 경제적 특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힘이 없는 내각이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관본위주의와 단위특수화는 노동당 39호실(외화획득기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총정치국, 군수경제인 제2경제위원회 등 내각이 관여할 수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제희생의 과제를 힘없는 내각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것에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된 책임회피 전략의 개연성이 있다. 김덕훈 총리가 가망없는 경제를 전담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와 신무기 개발 등 국방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김 위원장이 안변 침수피해 현장에서 농경지 소독을 직접 지휘하고 안석간석지에서 허벅지까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간 이유는 본인의 헌신과 대비된 내각의 무책임을 부각시키려는 연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정치를 연출하는 반면 내각의 무책임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북한 내 위기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7조 원으로 우리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2017년 - 3.5%, 2018년 - 4.1%, 그리고 2020년 - 4.5% 성장했으며, 최근 3년 연속 역성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인 셈이다. 8월 17일 국정원 국회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북한 아사자가 최근 5년 평균치의 2배 이상이며, 김씨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한 불평과 집단 항의로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까지 신설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

2023년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효과가 없으며, 최근 국내 입국 탈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990년대 북한에서는 심화조사건으로 25,000여 명이 처형 또는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정권은 당시 농업담당 비서였던 서관희를 간첩으로 몰아 북한의 엘리트를 포함해 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혈숙청을 단행했다. 심화조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6·25전쟁을 소환한 철저한 조작이었으며, 그 이유는 체제의 근간이 흔들렸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희생양 찾기와 공포정치 때문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4월 세포비서대회에서 이미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북한 경제는 악화일로의 길을 걸었다. 김덕훈 총리와 내각에 대한 강한 비판은 집권 이후 최악의 위기에 봉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희생양 찾기와 공포정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소지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안석간석지에서 격노해 지시한 내용들은 전례에 비추어 볼 경우 상당한 규모의 유혈숙청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8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덕훈 총리가 태국수상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단 두 줄짜리 기사였으며, 강도 높은 감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김덕훈 총리를 포함해 북한의 내각은 대규모 숙청의 회오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민군의 부상과 ‘신 선군정치’의 징후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핵심인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당 우위 정책노선을 지향해왔다. 선군정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위기에 봉착한 김정일 정권이 군에 의존했던 북한판 계엄통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1960년 8월 25일 김일성 주석과 함께 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처음으로 방문한 날을 선군절로 선전하고 있지만, 선군정치 용어가 처음 언급된 것은 고난의 행군기인 1997년 12월 12일 자 노동신문이다. 선군정치에서 인민군은 당을 제치고 김정일 정권과 체제 옹호의 중심 기구로 역할을 수행했다.

군에서 당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마식령 스키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각종 대규모 건설의 대부분을 인민군이 담당했다. 수해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 역시 인민군이 전담해왔다. 북한이 코로나 발발을 인정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을 때 인민군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가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내각에 경제를 위임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군 관련 행보에 주력해왔다.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분야는 군사부문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2022년의 연간 전체 군사부문 활동 6~12회보다 더 많았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덕훈 총리와 내각에 대한 질책과 달리 인민군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18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안변군 침수피해를 복구한 인민군에 대해 “짧은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는 기적을 창조”했다며 “혁명군대의 무한한 충실성과 투쟁기질을 다시 한번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고 치켜세웠다. 안석간석지 제방 붕괴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군대까지 동원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군을 부각시켰다. 김 위원장의 질책 직후인 8월 23일 노동신문은 간부들이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솔선수범해야 하며, 인민군대가 “당정책관철에서도 완벽한 성공작만 이루어내는 불패의 대오”라고 찬사를 보냈다. 8월 25일에도 노동신문은 간부들의 사업태도를 비판하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에 절대복종, 절대 충실한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에 이어 8월 24일 재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으며,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수거한 북한의 정찰위성 잔해를 분석하고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살리기보다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인민군이 점차 전면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인민군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안석간석지에서 김덕훈 총리와 내각의 문제에는 당 정책적 및 당적 지도를 맡은 당중앙위원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책임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인민군만 김 위원장의 질책을 피해 갔으며, 오히려 모범으로 부각된 셈이다. 김정은식 ‘신 선군정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김덕훈 총리와 내각에 대한 고강도 감찰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유혈숙청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질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제2의 심화조사건의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 모두 김덕훈 총리와 내각에 처음부터 힘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미 심화조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희생양 찾기용 유혈숙청을 단행한다고 해도 정권의 내구력과 체제 결속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인민군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신 선군정치’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역시 위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인민군이 전면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각과 각종 통치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